

與, 국회의원 투기 전수조사 제안...野 김종인 “해보자”

“배우자·직계존비속 소유·거래 현황 조사로 국민 불신 해소” 민주당 ‘공직자 투기·부패방지 5법’ 최우선 입법과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제안하자 국회의원 김종인 위원장이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김태년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국민들께서 한 점 의혹도 품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진행하고 불법이 확인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해주시길 요청한다”면서 “민주당은 사회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5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직자들의 투기는 우리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위협한다. LCT부터 LH까지, 시흥, 부산, 대구, 세종, 하남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공직자들의 투기와 비리 의혹이 국민의 분노와 박탈감을 안겨 주고 있다”면서 “직위를 이용해 사익을 취하는 공직 비리와 투기는 용납 될 수 없다.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 고위공직자, 국회의원과까지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서 우리사회의 공정질서를 다시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권한대행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한 점의 의혹도 허용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회의장님과 국민회의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랫물을 청소하려면 윗물

부터 정화해야 한다. 성역 없는 조사와 예외 없는 처벌만이 공직자의 투기를 방지 할 수 있다”면서 “국회의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소유 및 거래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통해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우리사회의 공정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현재 정부조사와 별개로 소속 의원 및 보좌진, 당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권한대행은 “야당도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와 사회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적극적으로 호응해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종인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한 번 해보죠 뭐. 300명이다”라고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공직자 본인이 아닌 가족의 땅 투기에 대해서도 “공직자는 자기 주변 관리를 철저히 잘 해야 한다”며 “공직자 주변 사람들이 자기 남편 등의 정보를 취득해 투기 활동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의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이번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 투기는 문재인 정권 불공정의 완결판”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문 정권이 입시·병역·부동산 등 우리 사회의 3대 공정 이슈 중 특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왼쪽)이 11일 국회 의장실을 찾아 박병석 의장에게 '21대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히 부동산에서 민심의 역린을 크게 건드렸다”며 “이번 사태는 집권 세력의 ‘투기 DNA’가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한 것을 잘 보여준다. 지금 많은 국민이 문재인 정권을 역대 최악의 불공정 정권이라고 얘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 핵심 인사 다수가

강남 땅 부자거나 ‘뚝뚝한 한 채’에 목매는 부동산 재테크 달인인 경우가 허다한데도, 국민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강요했다는 분노의 목소리가 나온다”면서 “‘춧불 정권’을 자칭하는 이 정권에 대한 기대감이 국민적 분노로 변해 민심이 매우 흉흉해졌

다. ‘춧불 배신 정권’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며 “상한 민심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검찰 조사와 감사원 감사조차 원천 차단하는지 묻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또 비례대표 리스크

양의원영·김경만 의원 3기 신도시 인근 투기 의혹...신도시 무관 해명

더불어민주당 양의원영·김경만 의원의 3기 신도시 인근 투기 의혹이 불거지는 등 여당 비례대표 의원들을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전부터 줄줄이 이어진 비례대표 의원 관련 의혹과 자질 시비로 ‘부실 검증’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총선 당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급조되면서 비례대표에 대한 검증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탓이다.

당장 21대 국회 임기 시작 전인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선인 신분이었다 양정숙 의원이 부동산 명의의 신탁을 통한 탈세, 정수장학회 출신 모

임 의원 경력으로 논란에 휩싸인 뒤 제명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의원은 10억원이 넘는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하는 등 부동산 자산 부실 신고 문제로 역시 제명됐다. 윤미향 의원은 정외기역연대(정의연) 후원금 회계 누락 의혹 등으로 임기 시작 전후로 정국을 뒤 흔들었고 결국 검찰에 기소됐다.

이번에 문제가 된 두 의원의 경우 양의원영 의원은 이번엔 문제가 된 두 의원의 경우 양의원영 의원은 지난 2019년 어머니가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 가학동 인근 땅을 지분 쪼개기 형태로 매입한 것이, 김경만 의원은 배우자가 2016~2018년 경기도 시흥 일대 땅을 매입한 것이 논란이 됐다. 두 의원

은 토지 매입 사실을 몰랐다가 신도시 예정지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으나 LH 의혹과 맞물려 이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해당 문제에 대해 “윤리감찰단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1차 판단을 해볼 것”이라며 “의원이 되기 전인 경우도 있어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기준을 잡아봐야 한다. 그 경우 최소한 공직을 이용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 윤리감찰단 차원의 조사를 시작하면서 투기 적발 시 ‘호적을 판다’는 각으로 영구제명 등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미 공언한 상황이다. 조사의 범위도 의원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비존속까지 포함돼 있어 이들 거래가 투기로 판정되면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들의 잔혹사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장에 박상기 전 법무장관

법무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로 공석인 검찰총장 제정을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를 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5명·비당연직 위원 4명 등 모두 9명으로 꾸려졌으며 위원장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맡는다.

당연직 위원 5명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업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검사장급 출신 인사 1명과 학식·덕망을 갖춘 비(非) 변호사 출신 3명으로 구성되는 비당연직 위원에는 박 전 장관과 김태기 전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원제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이 위촉됐다. 추천위는 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해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장관은 추천 내용을 존중해 이들 중 1명을 총장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서삼석, 농수축산림인 재난지원 지급 요구안 국회 제출

정부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은 농수축산림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증액요구안이 국회 농해수위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11일 “전국 농수축산림인 113만 8000가구에 대해 가구당 100만원씩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 1조1380억원을 포함하여 총 13개 사업 1조 3120억원 규모의 증액요구안을 농해수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2월 22일과 3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정부와 청와대를 비롯한 당정청, 국회 예결위 등에 농수축산림인들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건의문을 전달했다. 상임위에 제출되는 증액요구안은 정부안에 담기지 않은 농수축산림인 재난지원금 예산을 국회 단계에서 증액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다. 서 의원은 “코로나 19 국면에서 전국 640만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각종 직접지원 대책이 시행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농수축산림인 전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양향자, 화성 그린벨트 투기 의혹

2015년 1000평 땅 매입

더불어민주당 양향자(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이 경기도 화성시 신규 택지개발 지구에서 350m 떨어진 도로 없는 땅 1000평 가량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양 의원은 남편과 공동으로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에 3492㎡ 규모의 땅을 소유했다.

양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지역에 연결된 해당 토지를 2015년 10월에 매입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이 임야 구매를 통해 어떤

시세 차익도 목표한 바 없다”면서 “집권 여당의 지도부로서 LH 사태 논란으로 국민께서 공분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 부득이한 심리를 가져드리게 됐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기간 안에 신고한 자는 책임은 묻지 않되, 투기 이익은 포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발언이 알려지면서 더욱 비난을 사고 있다.

/연합뉴스

토지·다가구·주택용지, 임야 매매

1. 상가, 다가구 및 주택용지 ※ 목포남악 준주거, 담양양각 주거2종

(1) **담양읍 양각리 강변 관방제림, 독일 관광마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 15분 공용주차장 도로 3면 포장 배수로 기반시설됨, 경관수려, 정남향, 교통요지, 답 4220㎡(1,276평) 매 ㎡ 6십5만원**

(2) **무안군 삼양읍 남악리 준주거지 롯데마트앞 사거리코너 3만여세대 아파트 핵심상권 1천9평 매75억원**

2. 임야 (전원주택 펜션 농가주택, 휴양소 약초재배 적합)

(1)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포함 7만6천㎡ 광주간 35분, 4차 국도 근접 마을 변방 편백휴양림 30년생 1만주, 식재 농지가용면적 5천㎡ 월출산 바라본 쾌적한 자연경관, 전원주택, 펜션, 귀촌자 최상 ㎡ 5천원 급매**

(2) **화순 도곡 신성리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5810㎡(전 포함) 지식강 바라본 마을변방 정남향, 관방제림 경관수려 전원주택, 펜션, 휴양소, 최상 ㎡ 4만원 급매**

(3)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5분,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종전 밭으로 경작 평지 토질 마사토 22,140㎡, 각종 약초 재배 최상 현 지적상 맹지 자연림 소나무 자생, 매 ㎡ 2만원**

(4)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농림지역 도로접, 62,740㎡ 휴양림 적송 다수 자생 생약 재배 적합, 농가 주택가 ㎡ 5천원 급매**

국민공인중개사 대표 정중기 ☎ 062-268-8289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삼성출플러스 김건너면 통광주빌딩 내**

대지급매

위치 광주 상무지구 치평동 884-6

면적 2,816㎡(853평)

금액 71억

(부동산 중개인 사절합니다)

문의 010-6432-5070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
각서·운송료·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
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